

“권역별로 나눠 거점 육성해야 균형발전”

지역발전위 토론회서 주장 ... 박근혜 정부 ‘지역정책 실종’ 산업인력 92%가 수도권서 증가... 광역권 컨트롤타워 필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과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불균형성장으로 회귀했고, 특히 박근혜 정부는 ‘지역정책 실종 시기’로 지역 위기가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기술인력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증가한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 산업기술인력은 축소되고 있어 지역 주력산업이 침체되는 것은 물론 미래산업의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은 6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발전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지역발전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소장은 2008~2012년 순증가한 산업기술인력 92.4%가 수도권에서 증가한 반면 지역 산업기술인력은 축소됐고, 울산·경남·전남 등 주력산업 집적지역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도시가 성장하는 반면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멀고 인구 규모가 작은 소도시는 인구감소 경향이 심해져 ‘지방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발전 패러다임 변화, 저성장 추세 고착화, 기존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

춰 지역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가능하게 상생하는 지역발전’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며 광역발전권을 설정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를 활성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분권을 강화하면서 낙후·과소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중부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과 제주특별권을 더한 ‘5+1 광역발전권’을 지역경제산업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역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자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별도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그는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

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전환해 지역정책 기획·예산심의·정책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방안으로 내놓았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행정기관으로 지역혁신본부와 광역발전권별 발전정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재정 제도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그 확대분으로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로 참석한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선진국이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양측으로 하는 국가발전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서민 짓누른 빛 50억 탕감

생계형 채무자 413명 채권 소각

전남도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빛 50억원이 잿더미로 변했다.

전남도는 6일 도청 왕인실에서 시장 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주부 등 생계형 채무자 413명의 빛 50억원을 소각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날 전남지사, 임명규 도의회 의장,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채권을 기부한 전남지역 13개 신탁회와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회단체,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각행사는 전남도가 서민 사적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 빛

100억 탕감 프로젝트’의 첫 결실이다.

소각한 50억원의 채권은 전남지역 신탁회와 새마을금고에서 기부한 채권으로 1인당 평균 채무 원금 560만원, 이자 653만원이다. 담보능력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다.

이 자사는 “소각 대상 채권들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로 파산·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이 없는 서민들의 채무”라며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정도 빛 소각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조상땅 찾아주기 호응 3년간 116만1000㎡ 찾아줘

광주시는 최근 3년간(2014~2016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 준 토지가 735필지, 116만1000㎡로 소유주는 407명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캠퍼스 면적이 105만㎡인 전남대학교보다 더 넓은 수치다.

올해는 3월 말 현재 44명, 26필지 2만 2000㎡를 찾아줬다. 조상의 땅을 찾는 사람도 매년 늘어 2014년 119명, 2015년 134명, 지난해 154명이었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분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행정기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작성,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는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형이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웹서비스도 제공 중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선 투표지 분류기 시험 가동 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6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운용요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시험, 가동하고 있다. 이날 시험에는 대선에서 쓰일 기표용구로 찍은 일반 투표용지와 사전 투표용지가 사용됐으며 실제 개표 현장처럼 운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사전심사청구제 검토

전남도·22개 시군, 연찬회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복합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원스톱 처리제’와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도청 수리체에서 도와 시·

군 건축, 산림, 개발 등 관련 부서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민원 처리 연찬회’를 열었다.

다수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협의의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 민원인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민원 가운데 하나다.

연찬회에서는 한 번 방문으로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제’와 공장 신설 등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 제출할 수 있는 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민원 지연 처리 같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는 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과 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정

심판 청구 및 인용 사례 ▲부담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실태 ▲순천시 인허가팀의 복합민원처리 우수사례 등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영봉 전남도 도민소통실장은 “모든 민원이 마찬가지로 절차가 복잡한 복합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시책 외에도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美 언론, 北 5일 미사일 발사 실패

북극성 2형 아인 스킵드-ER

기중 놓고 미국 군 당국 엇갈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은 실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5일(한국시간) 국방부 관리 말을 인용해 북한은 전남 스킵드-ER 1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60km를 비행하던 중 주요 결함으로 동해에 추락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KN-15’(북극성 2형)로 판단한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수정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기중을 놓고 미국 군 당국 내에서도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수십 개의 위성을 띄워 북한을 정밀 감시하는 미국의 대북

정보수집 및 판단 능력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북한 언론은 6일 오전 현재 전남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한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 관영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새벽 방송에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전 6시 40분(한국 시간)에 일괄 송고한 3건의 기사에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엔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미사일 성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그간 관례를 볼 때 이번엔 침묵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사장 후보 박중배 교수

13일까지 인사청문 요청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박중배(59)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수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5명의 응모자 중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자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날 박 교수를 책임자로 최종 낙점했다고 6일 밝혔다.

진도 출신인 박 교수는 광주고과와 성균관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동경

공업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우건설 부장, 대우해운조선 연구직 전문위원,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수 등으로 역임했다.

도시공사는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3일까지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